# 광주시, 통합실무단·실국장 '통합행정' 상황 점검

## 강기정 시장 주재 통합 준비 상황·공동협력 사업 등 점검회의

## 법제·재정·행정시스템 정비… 실국별 구체적 실무 논의도 시작

광주시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통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핵심 행정통합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우선 통합 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약 25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특별시 운영에 걸맞은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 78건의 초안을 마련해 현재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8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 현황을 정밀 점검해 통합 예산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보탬e 등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작업을 추진해 예산 집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기반시설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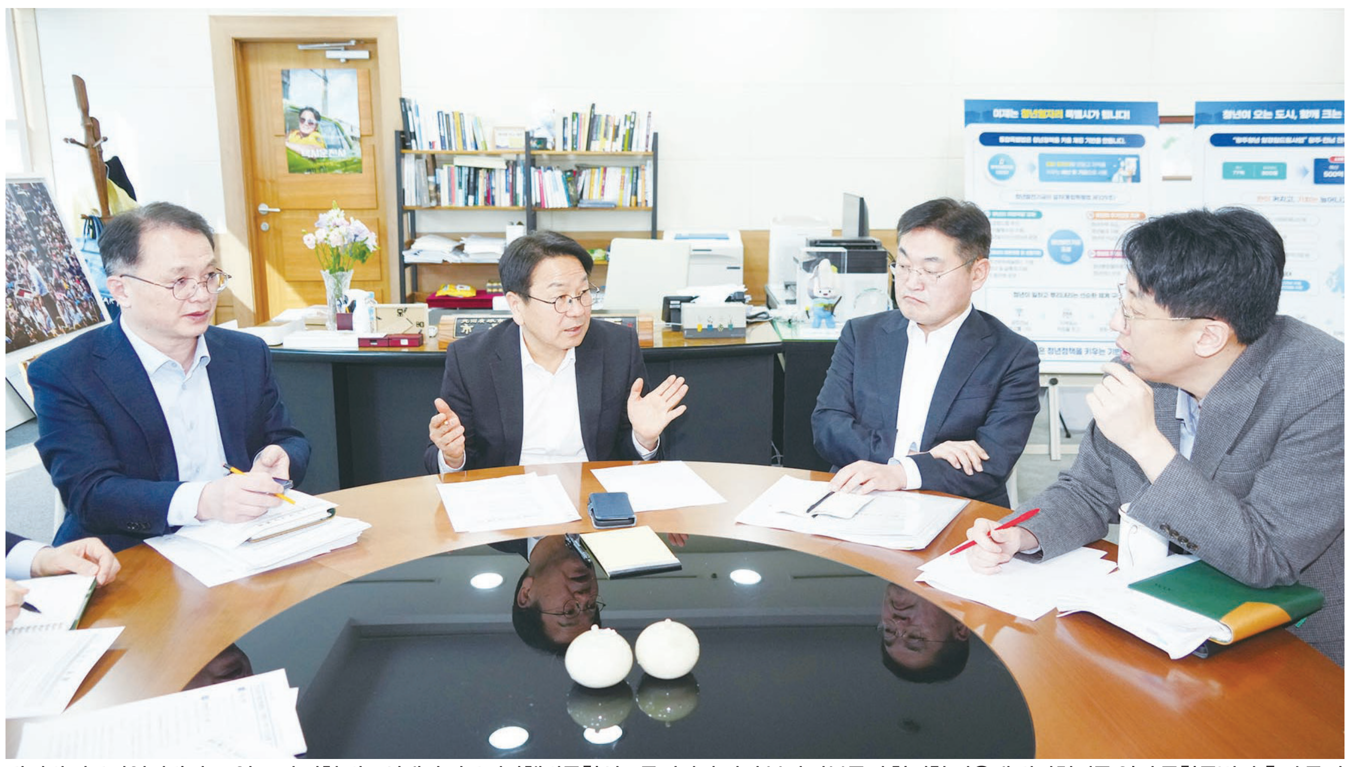
광주시는 공인 약 2600개와 행정 공부 72종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및 안내표지판 등 1만6000여 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목록을 확정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광주김치타운에서 '전남-광주 농정부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양 시도 실국별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정·재정·시스템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들이 통합 후에도 어떠한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전광춘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전 시청 집무실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전남도·행안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속도

## 7월 즉시 가동할 대민서비스·통합 행정시스템 등 과제 논의

## 로드맵·가이드라인 마련… 예상되는 문제·애로 공동 대응키로

전라남도는 13일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대민서비스와 전산망 통합 등 핵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천준호 행안부 출범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서비스와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통합 로드맵 수립과 핵심 과제 가이드라인 마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현황 전수조사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통합 준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두 시·도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직·인사 등 행정통합 관련 사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조직, 인사, 재정, 자치법규 등 핵심 통합 과제를 중심으로 실무작업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다"며 "통합 준비 과정에서 행안부와 긴밀히 협조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염선호 기자

##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송전탑'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 공정률 85%, 곧 신규 송전탑 선로 이설 진행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내에 설치된 고압 송전탑이 17년 만에 철거된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했던 송전선로가 제2순환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신규 송전탑으로 조만간 이설될 예정이어서 인근 거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다목적체육관 송전탑 이설작업 주민설명회 및 안전기원제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김병내 구청장과 이천 서씨 문중,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목적체육관 내 송전탑에서 새로 만든 송전탑으로 선로를 옮기기에 앞서 마지막 공정을 무사고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현재 송전탑 이설을 위한 공정률은 85% 수준으로, 한전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규 송전탑으로 선로 이설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송전탑에서 제2순환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신규 송전탑까지 거리는 180m 정도로, 이 구간에 남아 있는 송전선로는 모두 지중화된다.

하늘을 뒤덮은 거미줄 송전선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1월 진월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광주광역시와 한전이 송전탑 이설을 합의한 지 17년 만이며, 이후 구청에서는 이설 터를 놓고 서씨 문중과 한전까지 3자간 협의를 통해 신규 부지를 마련했다.

신규 송전탑 선로 이설 작업은 2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청과 한전은 늦어도 5월말까지 선로 이설을 완료할 방침이며, 한전은 선로 이설 공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기존 송전탑도 철거할 계획이다. 송전탑을 철거하면 약 130평 규모의 부지가 확보되며, 이곳에는 다목적체육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조성된다.

남구 관계자는 "토지 소유 문중과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송전탑 이설 마지막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송전선로 이설이 완료되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 미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 서구, 24시간 건강정보 '건강백세봇' 운영

## 카카오톡 챗봇 활용 민원·응급의료 등 6대 분야 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들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건강백세봇'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

'건강백세봇'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비대면 건강정보 안내 서비스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건소 주요 사업과 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단순한 전화 문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챗봇 서비스는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개 및 증명서 발급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병원·약국 및 응급의료 안내 ▲임신·육아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마음건강 및 찾아가는 보건소 ▲생활 건강정보 등 6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진단결과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국가 예방접종 일정 확인,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임산부 지원 사업 신청 정보 등을 챗봇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치매 조기검진, 마음건강 상담 등 보건소의 주요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광주서구보건소건강백세봇'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즉시 이용 가능하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어 '지역사회 차별·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교육' 20.5%, '인권침해 관련 관리 감독·구제 시스템 개선' 17.9%,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10.3% 순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 폭력 경험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18.4%가 '배우자로부터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 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도 9.2%였다.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언어 폭력 경험'은 11.5%, '친구·친정 식구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3.4%로 조사됐다. 다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이주여성 권리 보장·차별 해소 중심의 정책 전환'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어 교육·자녀 돌봄·문화 적응 프로그램 강화' 24.1%, '지역사회 차별·인권침해 개선 교육'과 '법률 자문·통역 등 현장 지원 체계 강화'가 각각 14.9%, '배우자 연동 체류 구조 개선' 12.6% 순이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